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 등 野 주도 처리… 與, 반대
‘여당배제’ 상설특검 개정안도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등 처리
정부, 대통령에 재의 요구할듯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민생 4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후 부결·폐기된 바 있다.

농산물가격안정법은 주요 농산물에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료를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이전에 투입한 생산비를 보장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5년 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쌀값 폭락에 시름에 젖은 농민과 농촌 전반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했다.

농식품부는 ‘대통령 거부권’까지 언급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등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했음에도 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본회의에 올랐던 안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와 ‘여당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11월 30일을 경과해 예산안 등을 심사 중인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과 직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

통령 또는 대통령 친·인척의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이 거부권에 가로막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답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 수익물수법,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법 등의 민생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답페이크나 카메라 등으로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성착취물 등으로 협박·강요가 이뤄져 범죄수익을 얻은 경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정준호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또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경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법안과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도 교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법안, 이공계 인재 육성·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한동훈 “명태군 사건 ‘구태정치’, 국민께 죄송”

당내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 구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명태군 씨의 ‘궁전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 중앙당사 등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 “과거 명 씨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명 씨 같은 선거 브로커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그런 유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김영선 전 의원 등 문제 공천에 대해서는 경선 기회도 안 주고 가차 없이 쳐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건 극복해야 할 구태 정치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며 “제가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했던 우리 당 차원의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철저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이여론조사 경선 개선 TF 팀장을 맡을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양부남 ‘5·18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폐지’ 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를·사진)은 28일 과거사 관련 법률에서 매년 반복돼 오던 5·18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했다.

또 기존 5·18 관련자 뿐만 아니라 새로



이 5·18 관련자로 인정될 자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의 제한 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매년 과거

사 배상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됐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바로잡는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진숙 ‘성범죄 옹호 변호사 광고 규제 법안’ 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를·사진)은 28일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변호사법은변호사·법무법인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나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변호사 광고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내달 4일 기업 등 참여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재명 대표가 12월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표명했지만, 속의 기간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을당론으로채택한 민주당은 12월 4일 기업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8일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 디베이트(토론)는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며 “이는 당내 의원 간 이견 조정이 아니라 이해관계당사자와의 디베이트라고 보면 된다. 기업 쪽과 소액투자자 쪽이 디베이트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처리 시기는 ‘정기 국회(12월10일)’ 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일정이 빠듯해 연내 처리로 보는 것이 유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12월 4일 열리는 상법개정 토론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경제계 인사, 투자자측, 상법 전문가, 이재명 대표와 정책위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을 경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영등포구 한 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상법 개정은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긴 한데, (여당이 위원장인) 정부위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며 “상법 개정이 아니라 공개 등록된(상장)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쪽(여당)으로 키를 넘기면 안 할 것이다.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999%”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굳이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일부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태열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불가피한 결정”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출석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8일 일본 주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으로 파형을 빚은 데 대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 하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

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하시겠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안은 지난 7월에 끝난 협상을 통해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일본이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기에 앞으로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합의 이행에 관한 문제로 계속 제기해 나가고 한다”고 말했다.

추도식 보이콧이 이루어지거나 아키코 외무성 정부관(차관급)의 과거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

력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추도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 강조하고 추도사 내용을 포함한 준비 사항에 대해 추도식 하루 전까지도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의 주관으로 자체 추도식을 개최한 배경에 대해서는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부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박 대사는 추도사에서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돼 가혹한 노동에 지쳐 쓰러져 간 한국인 노동자들의 역량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도광산이 아픈 역사와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한 일 양국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